제6호,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15조, 제77조,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출자를 한 다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할 것임.

6. 財産의 特色

가. 融通性的 制限

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 수행에 사용되는 공물로서 원칙적으로 사권의 설정을 금하고 있고 처분도 제한하고 있다. 다만 동 재산에 대한 사인의 사용 및 수익행위는 일정한 범위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.

나. 强制執行의 制限

국·공유재산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행정재산·보존재산의 불용통성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이 제한된다고 하겠으나, 잡종재산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. 다만,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의 환수에 의하도록 민사소송법(제529조)에 규정되어 있다.

다. 取得時效의 適用 制限

1991. 5. 31. 헌법재판소에서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내려지고, 곧이어 1992. 10. 1. 공유잡종재산도 동 대상이 된다는 결정이 내려져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을 개

정함으로써 현재는 잡종재산이 취득시효 대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.

판례1: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, 사실상 공용폐지되어 시효취득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는 판례('94. 3. 22 대법원 '93다56220)

○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.

○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이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,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,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.

판례2: 예정공물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('94. 5. 10, 대법원 93다23442)

○ 문화재보호구역내의 국유토지는 “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”, 즉 국유재산법 제4조제3항 소정의 “보존재산”에 해당하므로 구 국유재산법(94. 1.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.

○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도로구역의 결정, 고시 등의 공물지정행위는 있었지만,